

#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21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	제출년월일	2018.08.24.
검토위원	전문위원 최 충 열		

## I

##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업무, 권한 및 선발기준 (안 제3조~제6조)
- 다.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 라.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처리기간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7조)
- 마.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제19조)

바. 기타 제도개선 건의 및 과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20조~제2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8. 7. 26. ~ 2018. 8. 15.)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II

## 검토결과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 배치와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sup>1)</sup>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법 시행령 제51조의2<sup>2)</sup>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제1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제2호 납세자보호관(법 제77조제2항 인용), 제3호 권리보호요청(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2호 인용)을 규정하였는데,

**1)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2)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이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 안 제3조제1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77조제2항), 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고, 위 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데, 이는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를 명시하였고, 제5호는 그 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히 제1호는, 법 제76조제1항3)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관 련 업무’를 본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 여한 권리현장의 제정 권한 및 의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업무분장 형식으 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 자치단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납세자보호관 에게 위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 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3)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 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 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제4호는 그 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는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등 일반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요청 대상으로,

- 제1호는,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96조(결정 등)제1항4) 단서 조항에서,

---

**4)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5)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4조(결정 등)제3항제1호나목6)은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제2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납세자보호관의 사안별 재량판단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

**5)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제64조(결정 등)**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 안 제6조제1항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7)의 내용과 일치하며, 제2항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제1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을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고충민원 제외 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적시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제1호), 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제2호), 행정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제3호),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제4호),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제5호),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제6호),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제7호)으로

이는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또는 결정된 사항 등으로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함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

7)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안 제8조는,

고충민원 신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긴급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8)을 차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안 제9조제1항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제2항은 사실 확인,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하게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9)은,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은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배치한다 할 것이나,

---

**8)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충민원 처리기간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기본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타 기관에의 의견조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법령자문 등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한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로 처리 기간을 확대 규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검토 부분으로,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그 검토 대상을 각 구분(직권시정 대상, 위원회 회부대상, 이송 대상, 시정 불가 대상)하고, 안 제11조는 세부적 처리 방안을 적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10)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10)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안 제14조는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등  
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이며,

안 제15조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제1항 세무조사 진행 과정 및 제2항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적시하였  
는데, 모두 적합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 그 외에 안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제17조 권리보호요청  
의 처리, 제18조는 법 제76조에 따른 납세자권리보호헌장 제정에 대하  
여, 안 제20조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과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종합검토의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법제처  
의 조례안 검토 및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방세 납  
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